



낙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김 성 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한 전대미문의 원유 수급 조절제도 때문에 낙농인들은 지금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다. 낙농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아직 한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과 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해당사자인 낙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무시하고 책상에서 몇몇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 15명의 진흥회 이사들 중 생산자 측 이사들은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도입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땀**”
년동안 준비끝에 올 5월부터 납유를 시작한 신규농가입니다. 정말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투자만 해 오다가 이제서 겨우 사료값이나 할까 말까한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이란 말입니까.

진흥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직면한 것인지 요즘은 불안하여 죽지못해 살아가는 농가들의 심중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16일부터 시행한다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내용을 보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5년여의 준비끝에 시작한 낙농이 이제 목표유량의 70% 정도에 도달하여 내년 2월 정도에는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기준원유량이 150kg에 불과한데 생산량의 20%를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0원의 유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늘수록 손실이 많아지는데 목표유량에 맞춘 투자비용을 어떻게 회수한단 말입니까”

잉여원유 차등가격제한 전대미문의 원유 수급조절제도 때문에 낙농인들은 지금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다. 낙농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아직 한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간과 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해당사자인 낙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무시하고 책상에서 몇몇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 15명의 진흥회 이사들 중 생산자 측 이사들은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도입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아직 선진 낙농 국가들 중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한 적이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연 이 제도가

대한민국 낙농의 수급조절 제도로써 최선의 방법이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낙농인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도를 만든 진흥회나 도입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농림부에 여러 차례 신문 지면을 통해 권유했다.

제도를 만든 진흥회나 농림부에 묻고 싶다. 만약 농림부와 진흥회가 자금이 부족해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봉급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전에 봉급을 깎아야 하는 이유와 삭감폭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없이 봉급 봉투를

받고 나서 알았을 경우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낙농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의 도입 강행은 바로 이와 유사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낙농인들에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낙농인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더구나 공론의 절차마저 무시했기에 지금 제도 도입의 과정에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농림부나 진흥회는 낙농인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 진정한 이유를 아는지 묻고 싶다.

낙농가가 아닌 대다수 낙농관계자들 눈에는 원유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낙농인들이 이 제도를 반대한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원유가 과잉이 되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몰염치한 행위로 비춰질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오해이다. 오해라는 증거는 최근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조합원 외침을 들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상당수 서울우유 조합원들은 지금 낙농진흥회를 탈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부가 나서서 만약 진흥회를 탈퇴할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원유 감산을 통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더 큰 손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진흥회를 탈퇴해 조합 자체적으로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상당수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래도 낙농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서울우유 조합원들은 더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진흥회를 탈퇴하자고 주장하



는가. 그것은 바로 농림부에 대해서는 낙농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며, 진흥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낙농인을 위한 조직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진흥회에 남아 있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이 지금은 당장 고통이 뒤따를지 모르나 이 고통을 감내하면 앞으로 더 큰 희망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같은 서울우유의 예를 볼 때 지금 낙농인들이 잉여원유 차등 가격제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농림부와 진흥회에 대한 불신과 낙농업에 대한 비전 상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신의 벽은 이미 진흥회 설립 당시부터 시작됐다.

진흥회는 낙농가 가입을 위해 향후 10년동안의 생산 보장을 하면서 낙농인들에게는 아무 걱정 말고 생산에만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낙농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도 앞으로 계획 생산을 하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자율 생산 허용 기간이라 하여 낙농인이 생산한 원유는 제값을 주고 전량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낙농인들은 계약 생산이라는 쿼터제가 적어도 언젠가는 실시될 것으로 보고 부지런히 생산에만 전념했던 것이다. 울들어 우유가 남아돌자 낙농인들은 스스로 젓소 도태도 실시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낙농인 스스로 우



지금 낙농인들이 잉여 원유 차등가격제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농림부와 진흥회에 대한 불신과 낙농업에 대한 비전 상실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든 낙농인은 걱정 말고 생산에만 전념하라는 당시의 주체들은 오늘의 원유 과잉 생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행세하고 오히려 생산 과잉에 대한 마련 없이는 한국 낙농업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낙농인들이 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유 소비 홍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거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해 당사자인 낙농인들에게는 사전에 말한마디 없이 강행하겠다는 하니 과연 어느 낙농인이 농림부와 진흥회를 믿으려 하겠는가. 이 제도의 원초적 불신은 바로 여기서 기인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낙농인은 걱정 말고 생산에만 전념하라는 당시의 주체들은 오늘의 원유 과잉 생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양 행세하고 오히려 생산 과잉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는 한국 낙농업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낙농인들이 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한마디로 우리 낙농업의 역사를 뒤바꿔놓을 만큼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우리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 마련에 과연 몇사람이 참여해 만들었으며 제도 마련 기간은 몇일이 걸렸는가.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영세 낙농인의 도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도태될 영세 낙농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낙농을 사랑하고 의욕있는 젊은 낙농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장래 희망과 비전을 갖기 어렵다.

원유수급 긴급입문



도가 앞으로 한국 낙농의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이 제도를 만든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본이 지난 78년 계획생산제를 도입할 때 집유조합을 중심으로 낙농인 스스로 쿼터 물량을 정해 생산조절에 성공한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쿼터와 마찬가지로 기준 원유량을 정하는데 지난

1년동안의 일 평균납유량에 무조건 평균잉여율을 적용시키거나 폐업이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낙농 진입을 사실상 규제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접할 때 낙농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방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농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장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제도가 만약 도입되기 전에 낙농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낙농인들 편에서 만들어지고 지금은 고통이 뒤따르지만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장래에 더 큰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제도였다면 오늘 낙농인들은 걸 기대회라는 최후의 카드를 선택했을까 자문해 본다.

그렇다면 진정한 원유 수급 해결 방안은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연 이 제

따라서 이 제도의 실시를 유보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낙농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이 이해하는 제도를 만들어 낙농인들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몇 사람의 머리로 만든 이 제도에 대해 전문가의 검증은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한국 낙농업을 살리는 진정한 원유 수급 조절 방안이라 생각한다. (㉞)

〈필자연락처 : 02-2279-6310〉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이다.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어느 선진 낙농국을 보더라도 생산을 제한시킬지언정 젊고 의욕있는 낙농인들에게는 비전을 갖고 낙농 생산 기반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례를 들어 쿼터의 매매 가격이 낙농을 그만 두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5~6년 정도 먹고 살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든지 신규로 낙농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쿼터 물량을 사전에 배정한다든지 하는 낙농산업 기반을 지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배려가 전혀 없다. 낙농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급 조절 기관의 편의성에 더 무게를 두고 만들어진 것 같다.

